

새정부 국정 목표와 과제 들여다보니

일자리·성장에 밀린 경제민주화

박, 대선핵심공약 퇴색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수차례 약속했던 '경제민주화'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공약 이행 의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박 당선인이 복지

와 함께 내놓은 양대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국정목표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국정과제 자료집에서도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졌다.

세부항목에서도 경제민주화의 지가 퇴색했다는 증거는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산 분리 강화다. 공약집에서는 금융·보험회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이권분할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5%로 강화한다고 명시했지만 국정과제 자료집에서는 '의결권 제한 강화'로만 언급됐다.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한다는 공약은 자료집에서 해당 내용이 아예 빠졌다.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 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자료집에서는 '형량 강화', '검찰 구형에 못 미치는 판결 선고시 원칙적으로 항소' 수준으로 약화됐다.

이에 대해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부문과 인수위원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라는 표현이 경제민주화보다 더 광의의 개념"이라며 "향후 두 표현을 같이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면, 경제성장을 보다는 고용률

을 우선시할 것으로 보여 박근혜 정부는 '의결권 제한 강화'로만 언급됐다.

부가 성장 위주의 정책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를 국정목표 중 첫 순에 꼽았다.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5대 국정

지표 중 하나로 활기찬 시장경제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핵심과제로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것과 비교할 때, 박근혜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일자리에서부터 모든 정책을 출발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수위가 밝힌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

‘국민의 행복과 신뢰받는 국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국정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시대적 상황을 분석한 뒤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국정과제 자료집에서 '시대적 여건'과 '시대적 소명'으로 나눠 새 정부 출범의 의미를 자체 진단한 것이다.

인수위는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으나 각 분야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했다"고 전제한 뒤 경제 부문은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골고루 배분된다는 믿음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괴이했다. 또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자본이 취약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역할이 미흡하다"고, 정부 부문은 "부처 간 간막이 현상

이 만연해 있고 국민과의 소통이 미흡하다"고 각각 지적했다.

인수위는 또 ▲북한의 핵실험 등 대남도발이 지속하면서 안보불안 증가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으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전성 증가 ▲세계 경기위기 속으로 진단한 것이다.

인수위는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으나 각 분야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했다"고 전제한 뒤 경제 부문은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골고루 배분된다는 믿음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괴이했다. 또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자본이 취약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역할이 미흡하다"고, 정부 부문은 "부처 간 간막이 현상

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보정하면서 제도적 건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행복한 한반도'를 위해서는 '튼튼한 국방력과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대남민국의 주권과 안전을 확실히 확보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행복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며 "전통우방과 주변국 등과의 상생외교 및 외교평화 대회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신뢰받는 모범국가'를 위해 "경제·복지·사회통합·정신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성숙한 국가로 발전하고 환경과 ODA 등 지구촌 행복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갈등 조정 미루고 특수부 신설

결론 못낸 검·경수사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결론 내지 못하면서 공약은 물론 국정과제 자료집에서도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졌다.

이해진 인수위 사회안전분과 간사는 21일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추후에 국민이 참여해 다시 심층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의 '검찰개

혁' 부분에서 수사권 조정을 약속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하고 협장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사·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할'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검·경의 합리적 역할 정립' 부분에서 '국민의 편

의 관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국가 수사시스템 설계'라고 원론적인 언급을 하는데 그쳤다.

특히 추후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개혁'을 당하는 처지에 놓인 검찰이 논의 재개에 대해 거센 반발을 할 것으로 보여 수사권 조정이 새 정부 5년간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약 후퇴 논란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인수위는 정치적 충돌 논란이 일

었던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도 연내에 단행하기로 했지만 부정부폐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지검의 특수 수사를 총괄 지휘·지원하는 부서를 대검에 신설하기로 했다.

140대 국정과제 중에는 대통령 친인척 부정부폐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제 신설 내용이 들어있지만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을 두겠다는 공약은 빠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중학 '자유학기'·대입전형 간소화

창의교육·문화수준 확대

새 정부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공약을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국정목표에 따르면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지필시험 없이 토론·실습·체험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새 정부는 무상보육과 관

련, 0~5세 보육료를 전 계층에 지원할뿐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 이외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도 실시한다. 소득 하위 8%

분위 가정까지 등록금 대비 소득수준에 따라 전액~25% 까지 지원한다.

새 정부는 문화예술 창작 기반을 마련하고 콘텐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현재 1.39%

수준에 머물고 있는 문화 재정을 정부 재정의 2%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고부가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2017년 외국인관광객 1600만명을 달성하겠

는 목표도 추진한다.

그러나 교육, 문화 부문은 대선 공약집 수준에 그친 내용이 상당수여서 구체적인 로드맵, 실천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수위 활동 '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 직원들이 인수위 해단식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겨진 자료들의 이관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접수된 제안서 자료 가운데 정책에 반영된 자료들은 추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돼 보관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는 22일 해단식을 갖고 48일 간의 활동을 마친다.

현동 사저'로 복귀한데 따라 우려되는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저에 국가기지화통신망을 설치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또 24일 자정까지 안광찬 국가기비관리실장과 천영우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을 비상 대기시키고, 25일 0시께 김경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안보 상황을 인계한다.

청와대 경호실도 24일 자정 직전 새로운 대통령의 경호에 돌입한다.

한편, 군 당국은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 위급상황 발생을 대비, 합동 참모본부의 초기 대응반과 위기 조치반을 가동하고, 전군에 경계강화를 지시하는 등 완벽한 대비 태세를 유지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 당선인, 25일 0시 통치권 인수

이 대통령 24일 오후 사저 복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새벽 0시를 기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으로서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을 인수받는다.

박 당선인은 25일 오전 10시께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지 만, 새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는 이날 새벽 0시부터 시작된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 개시일을 2월 25일로 규정하고 있고, 지난 2003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0시로부터 개시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이 시각부터 대통령으로서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는 군 통수권을 비롯해 대통령의 통치권을 정식으로 행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비상사태에 대비해 대통령과 군을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포함해 국가기지화통신망도 즉각 가동된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4일 오후 '는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배우실 분!

▶ 분야 : NPL과 특수물건

▶ 시간 : 주1회, 2시간

3개월 과정

▶ 특징 : 배우면서 투자가능

1인1물건 낙찰보장

▶ 수강료 : 550만원

(주)오천경매 H.010-4667-9300

의뢰인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1. 2층 38평, 사무실 전용
2. 현, 보1000만원에 월60만원 임대중
3. 매매가, 9000만원
4. 문의 : 010-3605-5000

매매

신안동 제일오피스텔

1. 2층 48평, 사무실 전용
2. 현, 보1000만원에 월50만원 임대중
3. 매매가, 9000만원
4. 문의 : 010-3605-5000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진료문의 062)227-7575

*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심의원 제080130-증-26%호

漢字·漢文指導師資格